

꼭지예산 부정청탁 논란…지역 예산 확보 비상

기재부 “김영란법 저촉”…권익위 “예외 허용”

인맥 취약한 호남권 국비 지원 소외 가능성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꼭지예산’ 관행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꼭지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끼워넣는 지역구 민원 예산을 뜻하는 것으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행처럼 행해져왔다. 그러나 기재부가 꼭지예산에 대해 김영란법에 위반된 다며 이를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야 정치권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 지역구 사업 등의 꼭지예산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여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기재부 송언석 2차관은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예산당국이 (꼭지예산의 공익성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법에는 공무원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장에 있는 예산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신고해야 하니 곤혹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도 “꼭지예산의 공익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 루트 외의 예산은 가능하면 막자는 게 예산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재부의 입장은 자칫 기재부 등 관계 인맥이 취약한 호남권은 국비예산 지원에서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광주지역 한 의원은 11일 “각 부처와 기재부의 예산

안에 대해 국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예산을 챙기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꼭지예산을 막는다면 커다란 수단을 한 가지 잃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권익위는 지역 전체를 위한 예산은 김영란법의 예외로 허용된다고 했다”면서 “예비심사가 끝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예산을 집어넣는 좁은 의미의 꼭지예산이든, 이미 예산에 포함된 내용을 증액하는 등 넓은 의미의 꼭지예산이든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만들 당시 속기록에 그 문제(꼭지예산)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 내려져 있는데, 기재부가 자기들의 예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원들은 꼭지예산을 공식적인 예

산 심의 과정에 포함하는 방식을 선택할 생각이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의원들이 신중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서 지역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권익위·기재부·사법부 등의 판단이 필요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더민주 이계호 의원은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산 요청은 예전에는 말로 했지만, 지금은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엄밀하게 꼭지예산은 작년도에 사라졌다.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공식석상에서 논의된 예산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자리 모인 3당 원내 수석 부대표 새누리당 김도읍(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운영위원회 증인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잠룡들 文 주도권 견제 安 띄우기

국민성장론 비판…‘제3지대’ 중심 합종연횡 모색도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앞서나가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여야 잠룡들의 합종연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압도적 양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선 지형을 흔들려는 잠룡들의 모색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권 주자들은 최근 약속이나 한 듯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띄우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을 비판하면서 안 전 대표의 ‘창업국가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에 대해선 “기존의 소득 주도 성장을 벗어날 수 없는 분배론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권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을 고리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 전 대표에 힘을 실었다. 남 지사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에 이어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수도이전에 대해 저와 같은 인식을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달 21일 더민주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 간담회에 참석해 정파를 초월하는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중심의 제3지대론을 강조하는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8월 행정수도 이전 검토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놓고 새누리당의 남경필 지사, 더민주의 박원순 시장, 국민의당 안 전 대표

가 둘러앉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지난달 13일 김부겸 의원, 유승민 의원,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원희룡 지사, 남경필 지사가 “다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을 고리로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양극단을 제외한 ‘비패권지대론’을 띄우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남 지사의 행정수도 이전과 모병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새누리당 주주들과의 연대에도 결코 소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김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대해 “말은 거창하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고 혹평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법안 처리 ‘0’…최악 국회

개원 1년 반…2481건 발의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 가량 지났지만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6월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건수는 모두 2481건이다. 19대 국회 같은 기간 발의된 건수(2010건)에 비해 무려 23.4% 늘어났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된 실적은 없다. 19대 때는 같은 기간 263건을 처리했다.

이 같은 상황은 여야 간에 계속된 정쟁(政爭) 때문이다. 여름 하한기 휴회 관행도 겹쳐 지난 6월부터 매달 임시회를 열었지만 수차례 파행으로 입법 실적은

전무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퇴장한 본회의장에서 야 3당의 단독 표결로 헌정 사상 6번째의 국무위원 해임결의안이 처리되면서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정감사 참여 거부와 당 대표 탄핵농성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나마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주요 법안은커녕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이르러면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감 내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정권 차원의 모금 의혹에 맹공하고 있고,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는 등 정쟁의 불씨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탈북민은 통일시험장…수용체계 갖춰야”

박대통령 靑 국무회의 주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영란법에 대해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저녁 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물론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식사회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몰사리기 행태도 일부 나타난다

고 한다”고 지적한 뒤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또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검토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나주 에너지밸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필요”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1일 열린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코트라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사업인 ‘Invest Korea(IK)’와 관련, 나주 에너지밸리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IK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액(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신고한 금액)과 도착액을 비교해보면, 실제 도착한 투자금액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산업별 투자동향은 제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투자금액도 증가하기보다 줄어가는 추세이며 지역별 투자유치 실적의



경우도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유치실적이 현저히 적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비수도권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성을 지적

한 뒤 “특히 올 3월 나주의 한전 빛가람 에너지밸리도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광주·전남도 및 KOTRA와 업무협력 MOU를 체결한 상태”라며 “KOTRA의 Invest Korea 가 한국의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해외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유망기술 및 자본을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활동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